

여야 임시국회 앞 '주도권 싸움'

민주·국민의당 "朴정부 결산... 적폐예산 날낫이 밝힐 것"

한국·바른정당 "靑 인사·안보 검증"... 오늘 국회 일정 논의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여야는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에 방점을 두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날낫이 밝히는 한편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불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불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 대응 능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거

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안감이 커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산국회라고 하지만 국회가 열리면 당연한 현안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정부의 재정 집행현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면서 "다만 여당은 결산국회를 정치적 주도권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의될 주요 법안들도 '예열'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 방송개혁 등 쟁점과 함께 엘리트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오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추석 전인 이달 11일~30일 국감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어 15일에는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찬을 하며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野, 박기영 사퇴에 '靑 인사' 맹공

한국당 "강행이 빚은 촛극"...바른정당 "제2·제3 참사 우려"

여야는 지난 12일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사퇴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엄호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재야단체 및 과학계까지 결사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할 수 없이, 그것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물러났다"며 "이는 그간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해 온 청와대의 독선·불통 인사가 빚은 촛극"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

템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박 본부장에 대한 잘못된 임명과 여론에 굴복한 자진 사퇴는 청와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박 본부장 사태로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제2, 제3의 '박기영' 인사가 지뢰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을까 걱정된다"며 "박기영 사태는 총체적 참사의 서막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박기영 본부장 자진 사퇴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단이었다"면서 "여론을 반영하지 않으면 불통이라 지적하고, 여론을 반영하면 인사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이는 과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정 의장, 아웅산 국립묘지 한국 순국사절 추모비 참배
미얀마(Myanmar)를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 대표단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아웅산 국립묘지에 들러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文정부 국정 100일 평가 토론회

증세·복합 대응 등...정기국회 앞 존재감 부각

자유한국당이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한다.

13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 세 가지다.

조세정책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국방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현 '대화화'와 '제재 병행'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정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이처럼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오는 16일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울산, 서울, 대전, 강원, 부산·경남, 호남·제주, 인천·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與, 국정과제 쟁점 대응 TF 13개 가동

탈원전·최저임금 등 순차적으로...100대 과제 책임위원회와 '투트랙'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쟁점이 되는 현안에 집중 대응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 13개를 순차 가동하기로 했다.

이 13개 TF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위원회와 함께 여당인 민주당이 집권 초기 개혁 동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관리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100

대 과제 가운데 중점 과제를 추리고, 이를 TF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구성을 염두에 둔 중점 과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 통신비 인하,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등 13가지로 전해졌다. 각 TF는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형태와 활동 방식은 13개 TF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초 이미 당 기구로 출범해 활동해온 '탈원전 TF'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연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 각 TF의 단장과 간사를 정하고 차례로 각 TF를 출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TF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후속대책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13개 TF를 동시 다발로 가동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야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고 초점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3일 "13개 TF를 같이 돌리면 산만해지고 쟁점에 집중이 안 된다. 당장 뜨거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려 한다"며 "일단 TF를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TF 출범이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100대 과제 책임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여당으로서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장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각계 전문가 10명중 9명 "개헌 찬성"

각계의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만6841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84.4%로 높았다. 전문가의 69.3%가 '개헌국민대표' 참여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88.3%였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48.1%, 혼합형 정부(국민이 뽑은 대통령·국회 선출 총리 공동 책임 정부)가 41.7%였다. 또, 전문가 56.1%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